



2

공공기관 이전적지의 활용방안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2005년 6월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176개의 공공기관을 지역특성화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의 낙후성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이전한다는 것과 이전대상 공공기관 소재 지역의 피해 최소화 및 이전적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이전적지의 용도변경 용이,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관련 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와 12개 광역자치단체 간에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준비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별로 10~15개씩 쪼갬 공공기관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시·군·구간 경쟁과 이로 인한 주민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많은 부수적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한편, 국가균형법 제18조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의 이전의 포괄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정부는 오는 9월초 국무회의를 열고 「혁신도시건설특별법안」(이하 “혁신도시법”)을 심의·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하지만, 혁신도시법안 제42조 제5·6·7항에 의하면, 종전부동산(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계획, 이를 집행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시키되, 건교부장관의 일방통행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안 통과와 논쟁의 핵심사항임

- 이러한 배경 속에 경기도 소재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수는 56개이지만, 각 공공기관별로 지방이전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및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관련기관 및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음
- 더욱이 공공기관의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경기도 및 시군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경기도 및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들의 의견을 제시하든, 계획권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든, 반드시 활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활용구상과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의 적절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전략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전적지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 차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에서 이전되는 공공기관 이전적지(혁신도시법안에서는 “중전 부동산”으로 칭함) 및 그 주변지역

● 시간적 범위

-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기준년도를 2006년으로 함
- 계획구상을 위한 기준년도는 2020년도로 하여 경기도의 미래구상 (“경기비전 2020” 등) 시기와 통일시킴

● 내용적 범위

- 경기도내의 공공기관 이전적지 현황 분석
- 경기도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관련 주체들에 대한 의견 분석
-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선진사례의 시사점 정리
- 경기도 차원에서 각 부문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경기도 차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함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활용에 대한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확보 정책을 마련함

II. 공공기관 이전현황

1.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

가. 추진과정

1)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정의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법령상 제외되는 기관 이외의 모든 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시행령 제15조)
-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정부출연법인’, ‘주무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등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됨

2) 추진배경

- 수도권 집중현상의 근원적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함

3) 추진과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전략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함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인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현시점 (2006.09)이 국회에 계류중임

③그간의 추진경과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2003.06)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
-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 시·도별 배치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관한 ‘중앙-지방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기반구축(2005.05.27)
- 노조와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의 ‘노·정간 기본협약’을 체결
- 이전계획안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구성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위원회(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에서 9차례에 걸쳐 심의(2004.05.06~2005.06.22)
- 최종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2005.06)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

나. 공공기관이전 기본방향

1) 지방이전대상기관과 이전방법

①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선정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전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전대상기관을 선정
- 전국 공공기관은 모두 410개로, 이중 수도권에 346개가 있으며, 수도권에 있더라도 중앙행정기관과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있는 기관, 지방이전효과가 별로 없는 기관 등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이전대상은 176개 기관으로 확정(본사 정원은 약32천명에 달함)되었음

②이전지역선정

- 대상기관의 선호, 지자체의 유치계획, 지역 특성화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여 전체 인원 및 기관 수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이전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한정
- 공공기관이 이전할 시·도는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관성, 지역과급효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고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지역을 결정하도록 함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유치희망기관, 기관의 이전희망지역 등을 반영

③이전방식

- 시·도별 발전정도에 따라 배치규모 차등화
- 유사한 성격의 기관은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배치
- 구체적인 기능군 분류내용
 - 산업특화기능군(12개)
 - 유관기능군(9개)
 - 대규모 투자(출자)기관이 포함된 기능군은 시·도별로 중복배치되지 않도록 조정
- 기능군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기타이전기관'으로 분류

다. 공공기관이전 기본전략

1)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분류와 기본가이드라인

①이전대상공공기관의 분류

-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으로 346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분류하였고, 이들 기관들은 시도별 지역발

전 정도와 지역특성, 기능적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각 지역에 배치되었음

- 이전대상기관은 ▶정부소속기관 67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 등임

표 1 |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전국공공기관	수도권소재기관	이전대상기관				
		계	소속기관	투자·출자기관	출연기관	개별법인
410	346	176	위원회 13개 교육연수·연구기관 22개 기타 32개	26	54	29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대효과

- 수도권외 인구 안정화에 기여
-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2. 경기도의 공공기관이전 현황 및 분석

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황

1) 경기도 소재 지방이전 공공기관 상세현황

-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 56개(전체 176개의 31.6%)
- 경기도 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개 시에 총 55개 기관 부지면적 약 9,268천㎡(약 2,804천 평)이며 종업원 수는 29,370명에 달함

- 주거·상업·공업지역 37개 기관 약 2,638천㎡(약 798천 평) → 28.47%
- 녹지·관리지역 18개 기관 약 6,630천㎡(약 2,006천 평) → 71.53%

※수도권 전체 현황에서는 전과연구소 안양청사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언급할 경우에는 포함하기로 하며, 따라서 경기도 내에는 56개 이전기관이 있는 것으로 전제함

표 2 |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리스트

구분	시군	기관명	유형	관역	부지면적 (㎡)	종사원 (명)	담당 부처	용도지역			이전 지역	기능군
								용도	세부	비고		
총계		56개			9,267,849	28,939						
1	고양	국방대학교	소속	과밀	314,673	500	건교	녹지	자연	GB	충남	
2	고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소속	과밀	3,507	60	농정	관리	일산2택지		부산광역시	해양수산
3	고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출연	과밀	-	253	건교	주거	1종일반		경남	주택건설
4	고양	교통개발연구원	출연	과밀	-	200	건교	주거	1종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	
4					318,180	1,013						
5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소속	과밀	117,012	132	자치	녹지	자연	GB	충북	인력개발
6	과천	기술표준원	소속	과밀	58,781	226	경투	녹지	자연	GB	충북	기타
7	과천	광업등록사무소	소속	과밀	기술표준원내	34	경투	녹지	자연	GB	행정중심복합도시	
8	과천	무역위원회	소속	과밀	기술표준원내	51	경투	주거	2종일반	GB	행정중심복합도시	
9	과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소속	과밀	재경부내	10	경투	주거	2종일반	GB	행정중심복합도시	
10	과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과밀	재경부내	58	경투	주거	2종일반	GB	행정중심복합도시	
11	과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속	과밀	환경부내	21	환경	주거	2종일반	GB	행정중심복합도시	
12	과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소속	과밀	재경부내	9	경투	주거	2종일반	GB	행정중심복합도시	
13	과천	전기위원회	소속	과밀	기술표준원내	39	경투	주거	2종일반	GB	행정중심복합도시	
14	과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소속	과밀	재경부내	25	재경	주거	2종일반	GB	행정중심복합도시	
15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연	과밀	22,321	158	기획	녹지	자연		충북	정보통신
11					198,114	763						

자료 : 경기도, 2006.09

〈표2〉 계속

구분	시군	기관명	유형	권역	부지면적 (㎡)	종사원 (명)	담당 부처	용도지역			이전 지역	기능군
								용도	세부	비고		
16	성남	한국토지공사	투자	과밀	41,392	2,524	건교	상업	일반		전북	국토개발
17	성남	한국도로공사	투자	과밀	203,961	4,347	건교	녹지	자연	GB	경북	도로교통
18	성남	대한주택공사	투자	과밀	37,997	4,139	건교	상업	일반		경남	주택건설
19	성남	한국가스공사	출자	과밀	16,738	2,728	경투	상업	일반		대구광역시	기타
20	성남	한전기공주식회사	투자	과밀	6,812	3,815	경투	상업	중심		광주광역시	전력산업
21	성남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출연	과밀	115,769	148	보건	녹지	자연		전북	기타
22	성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속	과밀	-	30	건교	상업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	
7					422,669	17,731						
23	수원	자치인력개발원	소속	과밀	50,222	112	자치	주거	1종일반		전북	기타
24	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소속	과밀	91,914	86	자치	주거	1종일반	주거+지녹	제주도	교육연수
25	수원	원예연구소	소속	과밀	745,679	554	농정	녹지	자연		전북	농업지원1
26	수원	농업과학기술원(본원)	소속	과밀	562,951	376	농정	주거	1종일반	주거+지녹	전북	농업지원1
27	수원	농업공학연구소	소속	과밀	85,381	172	농정	주거	1종일반	주거+지녹	전북	농업지원1
28	수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소속	과밀	38,850	268	농정	주거	1종일반	주거+지녹	전북	농업지원1
29	수원	농업연수원	소속	과밀	41,637	42	농정	주거	1종일반		전남	농업지원2
30	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소속	과밀	-	32	건교	주거	1종일반		제주도	교육연수
31	수원	작물과학원	소속	과밀	1,408,160	615	농정	주거	1종일반		전북	농업지원1
32	수원	축산연구소	소속	과밀	1,088,423	334	농정	녹지	자연		전북	농업지원1
10					4,113,217	2,591						
33	안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밀	6,612	91	농정	상업	일반		경북	농업지원3
34	안양	국립수과과학검역원	소속	과밀	56,309	245	농정	상업	일반	상업+주거	경북	농업지원3
35	안양	국립식물검역소	소속	과밀	6,079	75	농정	상업	일반		경북	농업지원3
36	안양	국립종자관리소	소속	과밀	5,423	64	농정	상업	일반		경북	농업지원3
37	안양	국토연구원	출연	과밀	8,155	310	건교	상업	중심		행정중심복합도시	
38	안양	한국석유공사	투자	과밀	4,662	508	경투	상업	중심		울산광역시	에너지
39	안양	전파연구소(안양청사)	소속	과밀	19,297	22		공업	일반		전남	정보통신2
40	안양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소속	과밀	임대	40	노동	상업	일반		울산광역시	
7					106,537	1,355						

자료 : 경기도, 200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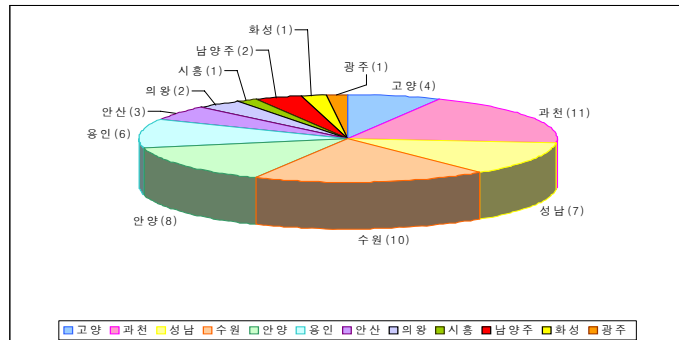
〈표2〉 계속

구분	시군	기관명	유형	권역	부지면적 (㎡)	종사원 (명)	담당 부처	용도지역			이전 지역	기능군
								용도	세부	비고		
40	용인	에너지관리공단	출연	과밀	13,114	470	투자	주거	1종일반		울산광역시	에너지
41	용인	한국전산원	출연	성장	6,276	203	기획	주거	3종일반		대구광역시	기타
42	용인	조달청중앙보급창	소속	성장	13,554	88		상업	일반		경북	기타
43	용인	국립경찰대학	소속	성장	896,145	220	자치	녹지	자연		충남	
44	용인	법무연수원	소속	성장	717,267	120	기획	녹지	자연		충북	인력개발
45	용인	한국전력기술(주)	투자	성장	8,924	1,800	경투	주거	2종일반		경북	기타
6					1,655,280	2,901						
46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소속	성장	3,963	60	공통	주거	2종일반		충남(아산)	
47	안산	교통안전공단	출연	성장	2,557	300	건교	상업	일반		경북	도로교통
48	안산	한국해양연구원	출연	성장	92,938	459	농정	주거	1종일반		부산광역시	해양수산
3					99,458	819						
49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	과밀	8,264	120	경투	주거	1종일반		울산광역시	에너지
50	의왕	농업기반공사	투자	과밀	92,932	1,000	농정	녹지	자연		전남	농업지원2
2					101,196	1,120						
51	시흥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공	과밀	41,429	286	경투	녹지	자연		충북	기타
1					41,429	286						
52	남양주	중앙119구조대	소속	성장	100,566	100	자치	녹지	자연	GB	대구광역시	기타
53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 (영화진흥위원회)	공공	성장	1,323,100	90		관리	개발진흥		부산광역시	
2					1,423,666	190						
54	화성	한국농업전문학교	소속	성장	302,932	94	농정	관리			전북	농업지원1
1					302,932	94						
55	광주	한국노동교육원	출연	자연	485,171	76	경투	관리	개발진흥		충북	인력개발
1					485,171	76						

자료 : 경기도, 2006.09

2) 경기도내 시군별 이전기관 수

- 이전기관은 고양(4), 과천(11), 성남(7), 수원(10), 안양(8), 의왕(2), 용인(6), 안산(3), 화성(1), 시흥(1), 남양주(2), 광주(1)로 과천에 가장 많은 11개가 있으며 수원, 안양, 성남 순으로 많음



| 그림 1 | 경기도내 시·군별 이전기관 수

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기관 분석

1) 이전기관의 분류

- 이전기관 형태에 따른 분류

| 표 3 | 이전기관 형태에 따른 분류

구 분	주요 기관명
정부소속기관(35)	국방대학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술표준원, 광업등록사무소, 무역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기위원회,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치인력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예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전파연구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조달청중앙보급창, 국립경찰대학, 법무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중앙119구조대, 한국농업전문학교
정부출자기관(1)	한국가스공사
정부투자기관(7) *재투자기관 포함	농업기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정부출연기관(11)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산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개별공공법인(2)	한국가스안전공사, 영화종합촬영소(영화진흥위원회)

• 이전기관의 산업별 특성에 따른 분류

표 4 | 이전기관의 산업별 특성에 따른 분류

구 분	주요 기관명
농림어업 산업관련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농업공학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기반공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연수원
광업 산업관련 기관	광업등록사무소
석유화학고무 산업관련 기관	한국석유공사
전기 및 가전 산업관련 기관	한전기공(주)
정보통신기기 산업관련 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산원
전력가스수도 산업관련 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전파연구소
건설 산업관련 기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금융 및 보험 산업관련 기관	금융정보분석원
교육 및 사회보장 기관	국립경찰대학, 국립특수교육원, 국세공무원, 법무연수원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기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술표준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조달청중앙보급창, 중앙119구조대

3) 부지가치 및 지방세 추정

- 경기도 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2004년 공시지가 기준 부지가치는 2조6,000억 원이며, 공시지가 기준 3배의 시세는 7조8,000억 원
- 2004년 공시지가 기준 부지가치 및 시세추정을 하면, 공시지가는 수원시 → 용인시 → 성남시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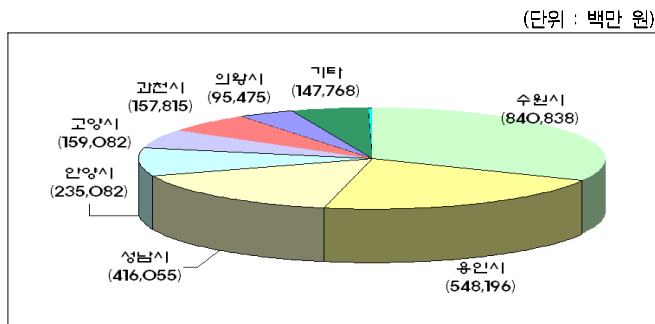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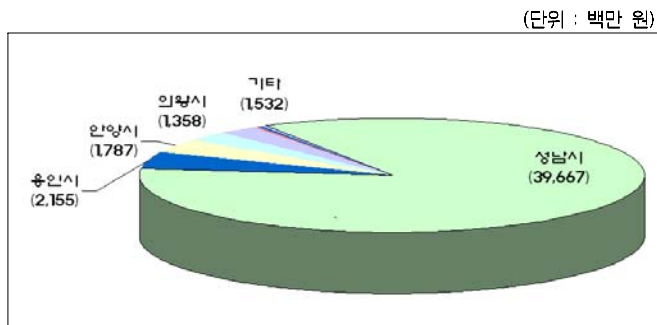


그림 2 | 시·군별 공공기관 공시지가(2004년 기준)

- 경기도소재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은 2004년 기준으로 465억에 달하며, 대규모 정부투자기관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성남시가 396억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85%를 차지



| 그림 3 | 시·군별 공공기관 지방세(2004년 기준)

3.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기대효과

1)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

- 지역재정 악화 및 지역경제 침체
- 수도권 기능의 약화 초래
- 일방적인 지역할당식 배분으로 인한 비효율성 초래
- 이전지역의 자족적 도시기능 상실
- 수도권 내 불균형 가속화 우려
- 강제이전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 전국 부동산시장의 투기장화

2) 기대효과

① 긍정적 측면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성공적 이전을 할 경우 수도권에서의 공공기관 비중이 현재 85%에서 35%수준으로 감소하여 공공기관 종업원 3만 1,949명과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지방으로 빠져 나가면서 수도권의 양적팽창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 산업 종사자들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대 90만 명의 인구 분산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
-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 및 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 지방경제의 고용증가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으로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가능성 기대

② 부정적 측면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거의 반강제적으로 실시하였고, 광역시·도별 1차 배분과정에서도 반발과 혼란이 극심했던 만큼 그와 같은 양상이 재연될 우려 배제하지 못함
- 현재 12개 광역시에 대한 공공기관 1차 배분 안은 확정되었지만, 이들 176개 공공기관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정해진 바 없어 시·군·구간 과열경쟁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 있음

-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인구분산효과로 인해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지만, 오피스 시장의 경우 공공기관의 27%가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시작될 경우 강남지역의 오피스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공공기관 종업원들이 가족단위로 이주할 경우 자녀교육, 주거, 직장 등 다양한 적응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모든 종사자 및 가족 등 90만 명이 지방으로 이주한다면 가구당 평균 인원수 3.1명을 기준으로 대략 29만 호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및 생활 문화시설 등도 건설되어야 함
- 지방경제를 위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빠져 나간 뒤 수도권 대책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Ⅲ.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을 위한 기초분석

1.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가. 경제적 효과 분석

1) 지역별 경제지표 변화

① 지역별 GRDP 변화

●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 <표 5>에서 보듯이 경기지역의 성장률을 높게 가정할수록 경기지역 GRDP 감소액은 커질 전망
- 국가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증가할수록 경기지역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반적인 GRDP 손실이 확대된다고 할 수 있음

표 5 | 경기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별 2012년도 GRDP

(단위 : 10억원)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경 기	-1957.6	-2195.4	-2609.4
서 울	299.4	354.6	122.3
충 남	238.2	267.1	267.5
충 북	100.6	109.0	122.9
호 남	441.7	490.5	535.4
강 원	18.8	19.9	21.8
경 북	487.3	518.4	634.1
경 남	382.0	413.0	533.4
합 계	10.4	-32.9	-372.0
2009~2021 연평균	-239.5	-327.2	-969.0

● 전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시간이 지날수록 타 지역의 GRDP 증가폭이 점차 커지지만 경기 지역의 GRDP 감소 폭도 함께 증가

- 경지지역소재 공공기관 이전의 역동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한 전 지역의 GRDP 합은 2009년~2021년까지 연평균 시나리오 1에서 2천395억 원, 시나리오 2에서 3천272억 원, 시나리오 3에서 9천 690억 원 감소할 전망

②지역별 투자 변화

●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 <표 6>은 경기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2012 년도의 지역별 투자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GRDP 변화와 마찬가지로 경기지역의 성장률을 높게 가정할수록 경기지역의 투자 감소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표 6 | 경기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별 2012년도 투자변화

(단위 : 10억원)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경 기	-879.8	-1002.8	-1673.6
서 울	-0.4	-1.0	-10.0
충 남	57.6	63.8	95.2
충 북	25.9	28.7	45.1
호 남	137.5	152.2	205.3
강 원	0.1	0.1	-0.1
경 북	144.3	157.1	222.4
경 남	120.4	135.3	200.0
합 계	-394.5	-466.5	-915.7
2009~2021 연평균	-515.0	-631.9	-1372.9

● 수도권과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 지역과 지역 전체의 투자변화는 <그림 4>에서 찾을 수 있음

- 경기 지역의 투자 패턴을 보면 2012년보다 공공기관이 일부 이전 되는 2009년에 투자 감소 폭이 더욱 클 전망. 이는 현재의 투자는 미래의 자본스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도 자본에 대한 경기지역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2009년도의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됨

③지역별 소비변화

- 투자는 시간에 따라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소비는 일정한 증감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기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지만 투자에 비해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 이와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는 기타 지역의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함
- 경기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2012년도의 경기지역의 소비는 시나리오 1에서 약 1천91억 원, 시나리오 2에서 약 1천137억 원, 시나리오 3에서 약 1천116억 원 감소할 전망

④지역별 지방정부지출 변화

● 가정

- 분석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경비지출 감소는 중앙정부의 지출감소를 의미
- 중앙정부의 경비지출감소와 상응하여 이전대상지역의 지방정부의 경비지출은 증가함¹⁾

● 지방정부지출 변화

- 경기지역의 지방정부 지출은 시나리오에 따라 136억 원~255억 원 감소할 전망. 반면 경기지역 이외의 지방정부 총 지출은 5천128억

1) 지방정부의 경비지출 증가 대신 가계의 소비지출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방정부지출 증가는 감소하고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6천703억 원 증가할 전망

-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총 지방정부 지출은 3천910억 원~5천51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2) 지역별 고용 및 부가가치 변화

① 지역별 고용변화

- 본 연구에서와 같이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임금보다는 노동 이동 보다 활발히 일어날 전망이다²⁾이며,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근로소득은 주로 노동의 지역 간 이동이나 실업에 의해 조정될 전망
- 추정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취업자 13,401명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였음
 -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전될 경우 경기지역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자 수는 더욱 감소하여 <표 7>에 나타난바와 같이 시나리오별로 74,715명 ~77,534명 감소할 전망

표 7 | 경기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별 2012년도 고용 변화

(단위 : 10억원)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경 기	-74,715	-74,715	-77,534
서 울	0	0	0
충 남	5,014	4,835	4,835
충 북	1,544	1,544	1,544
호 남	12,634	12,634	12,107
강 원	0	0	-67
경 북	13,582	13,582	13,311
경 남	8,908	8,908	8,908
합 계	-33,033	-33,212	-36,897
2009~2021 연평균	-41,653	-41,757	-45,768

2) 본 연구 결과에서도 실질임금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근로소득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 경기지역과 달리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은 직접적인 고용증가보다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② 지역별 부가가치 변화

- 고용감소와 자본소득의 감소로 인해 경기지역은 1조6천892억 원~2조6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감소할 전망이며, 고용변화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의 부가가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의 전국의 부가가치 합은 5천526억 원~1조1천38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부가가치 감소는 6천284억 원에서 1조6천497억 원에 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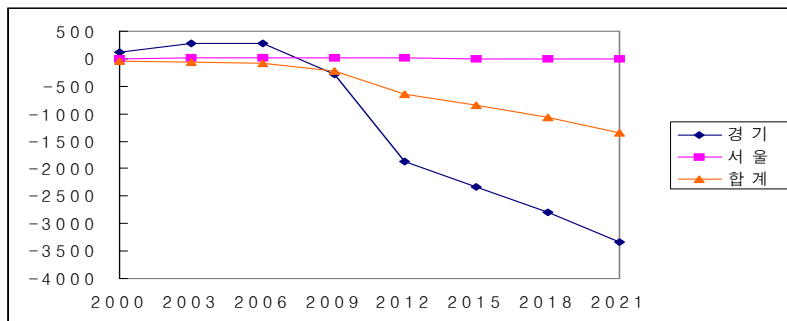


그림 4 | 경기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기·서울지역의 부가가치 변화 : 시나리오 2

3) 거시 경제지표 변화

- 특정지역의 투자, 소비, 지방정부지출, 순수출의 감소가 다른 지역의 동일한 경제지표의 증가에 의해 완전히 상쇄된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 이전은 경제적 효율성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 그러나 지역별로 산업구조, 투자 및 소비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전체의 소비, 투자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농림어업 및 광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이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국가 전체로 볼 때 농림어업 및 광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 반대로 반도체 및 전기기기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이전된다면, 이 지역의 경기침체는 반도체 및 전기기기 산업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투자, 소비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됨

IV.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적지 유형분류 및 여건현황

1. 유형분류 및 특성

가. 1차 기준

1) 이전기관 크기에 따른 분류

- 1만㎡의 수준은 해당 기초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수준의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규모로 충분하다 판단되어 1차적 규모기준으로 설정하게 됨
- 10만 ㎡는 약 3만3천평 규모로 해당 기초지자체의 관리범위로 보이지 만,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시설 및 기관의 이전 전·후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그 이상의 100만 ㎡는 경기도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파급 효과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중요한 지역으로 설정함

표 8 | 이전기관 크기에 따른 분류

구 분	주요 기관명
1만㎡미만(12)	• 교통안전공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석유공사, 국립종자관리소, 국립식물검역소, 한국전산원,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한전기공(주),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1만㎡이상~10만㎡미만(17)	• 에너지관리공단, 조달청중앙보급창, 한국가스공사, 전파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주택공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농업연수원, 자치인력개발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술표준원, 농업공학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농업기반공사, 한국해양연구원
10만㎡이상~100만㎡미만(11)	• 중앙119구조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업전문학교, 국방대학교, 한국노동교육원, 농업과학기술원, 법무연수원, 원예연구소, 국립경찰대학
100만㎡이상(3)	• 축산연구소, 영화종합촬영소, 작물과학원

- 1만㎡ 미만의 기관은 12개이며, 1만㎡ 이상~10만㎡ 미만의 기관은 17개로 전파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연수원, 기술표준원, 농업공학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있음
- 10만㎡ 이상~100만㎡ 미만의 기관은 11개로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도로공사, 국방대학교, 한국노동교육원, 농업과학기술원, 원예연구소, 국립경찰대학 등이 있음
- 100만㎡ 이상의 기관은 3개로 축산연구소, 영화종합촬영소, 작물과학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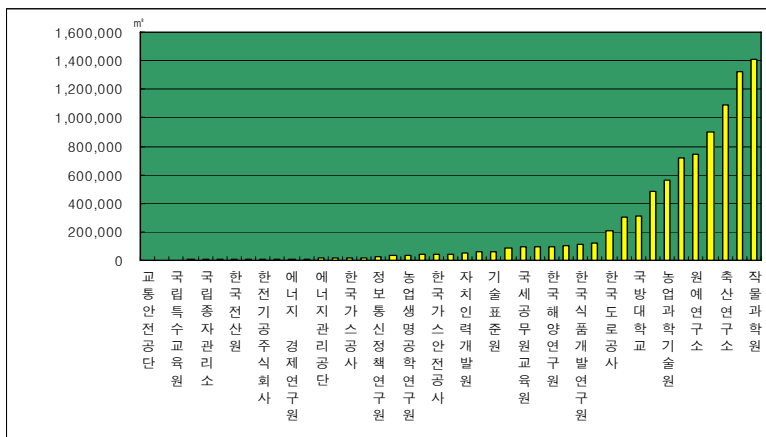


그림 5 | 이전기관 크기 순위

2) 이전기관 종사자수에 따른 분류

- 경기도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GRI, 2005)가 있는데, 이 선행연구에서는 경기도의 54(2005년 분석당시)개 기관의 이전에 대한 총량적 분석을 하여 개별적인 이전부지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개별 공공시설의 순경제가치의 창출

및 자산규모 등 경제적 분석은 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로 「종사자 수」를 설정하여 분석함

- 종사자의 수는 주변지역의 생활권으로 표출되고, 그들의 소득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함축하고 있어 경제적 파급의 규모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지님
- 종사자의 규모를 보면, 200명을 기준으로 크게 양분되고 있으며, 200명 정도의 종사자면, 평균 3-4인 가정으로 볼 때, 600-800명의 가족으로 예상되며 부수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보면 근 1,000명 선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 차원의 검토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짐
- 200명 이상의 500명 기준과 1000명 기준은 전체 공공기관의 분포를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값으로 특별한 의미 부여는 없음

표 9 | 이전기관 종사자수에 따른 분류

구 분	주요 기관명
200명 미만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파연구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농업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립종자관리소, 국립식물검역소, 한국노동교육원, 국제공무원교육원, 조달청중앙보급장, 영화종합촬영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중앙119구조대, 중앙공무원교육원, 자치인력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법무연수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200명이상~500명미만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산원, 경찰대학, 기술표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축산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한국해양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500명이상~1,000명미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1,000명 이상(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기공(주),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 종사자수 200명 미만의 기관은 20개이며, 종사자수 200명 이상~500명 미만의 기관은 12개, 종사자수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의 기관은 4개, 종사자수 1,000명 이상의 기관은 8개로 한국전력기술(주), 한국가스공사, 한전기공(주), 한국도로공사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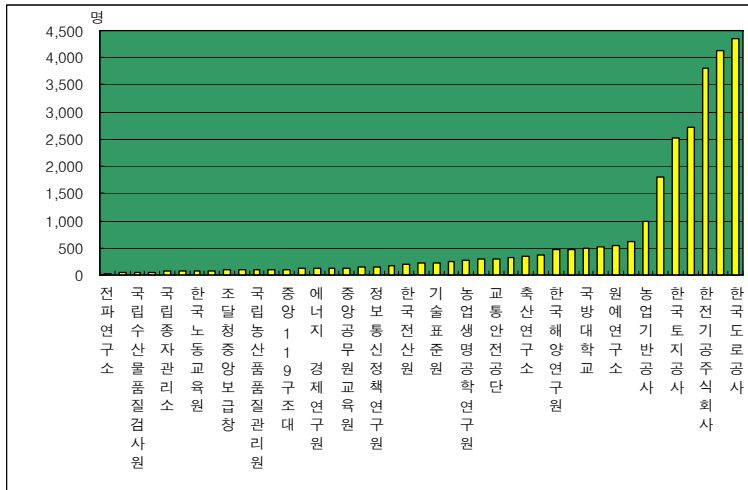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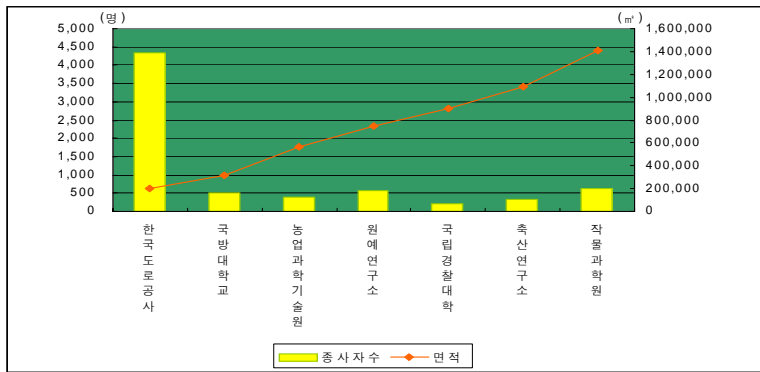
그림 6 | 이전기관 종사자수 순위

3) 이전기관 크기와 종사자수에 따른 분류

- 면적 10만㎡ 이상이고 종사자 200명 이상인 기관

표 10 | 이전기관 크기와 종사자수에 따른 분류

면적 10만㎡ 이상	n	종사자수 20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119구조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업전문학교, 국방대학교, 한국노동교육원, 농업과학기술원, 법무연수원, 원예연구소, 국립경찰대학, 축산연구소, 영화종합촬영소, 작물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도로공사 국방대학교 농업과학기술원 원예연구소 국립경찰대학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산원, 국립경찰대학, 기술표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축산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한국해양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공사,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농업기반공사, 국방대학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기공(주),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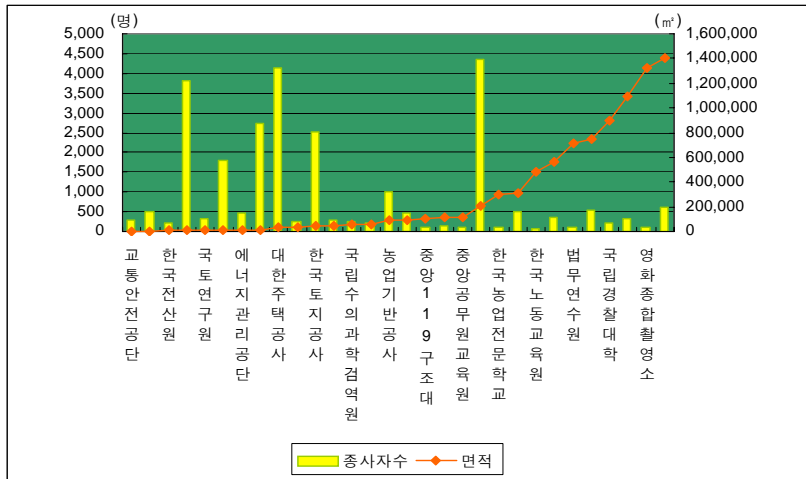
Ⅰ 그림 7 | 이전기관 크기 및 종사자수 분류 Ⅰ

- 면적 10만㎡ 이상이고 종사자 200명 이상인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국방대학교, 농업과학기술원, 원예연구소, 국립경찰대학,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으로 학교나 연구소 등이 이 분류에 해당하며, 면적이 클수록 종사자수가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면적 10만㎡ 이상 또는 종사자 200명 이상인 기관

Ⅰ 표 11 | 이전기관 크기와 종사자수에 따른 분류 Ⅱ

면적 10만㎡ 이상	U	종사자수 20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119구조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업전문학교, 국방대학교, 한국노동교육원, 농업과학기술원, 법무연수원, 원예연구소, 국립경찰대학, 축산연구소, 영화종합촬영소, 작물과학원 	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공사 한국전산원/한전기공(주) 국토연구원/한국전력기술(주) 에너지관리공단/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토지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기술표준원 농업기반공사/한국해양연구원 중앙119구조대/한국식품개발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한국도로공사 한국농업전문학교/국방대학교 한국노동교육원/농업과학기술원 법무연수원/원예연구소 국립경찰대학/축산연구소 영화종합촬영소/작물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산원, 국립경찰대학, 기술표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축산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한국해양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공사,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농업기반공사, 국방대학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기공(주),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Ⅱ | 그림 8 | 이전기관 크기 및 종사자수 분류 Ⅱ

- 면적이 10만㎡ 이상 또는 종사자수 200명 이상인 기관은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산원, 국토연구원, 법무연수원, 영화종합촬영소 등이 있음

나. 2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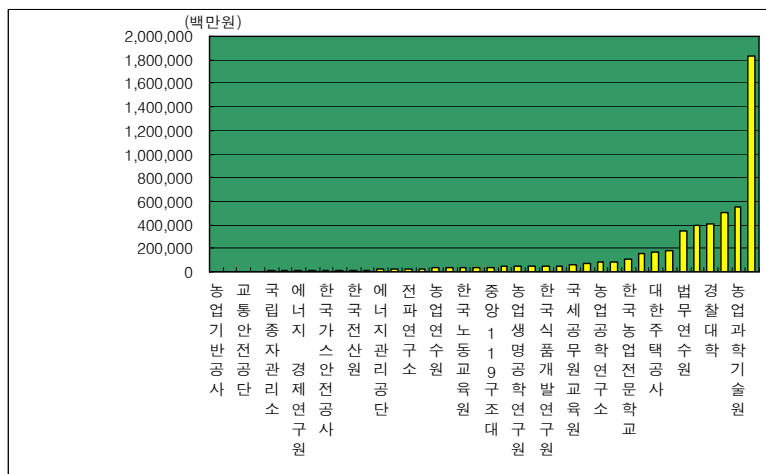
1) 이전기관 부지가격에 따른 분류

- 이전부지의 가격은 현 기준공시지가로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매각당시의 시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함
- 다만, 개별 부지들의 경향성을 일정하게 보고, 자체적인 내부에서는 상대적인 고저를 판단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함
- 100억 정도의 재정은 경기도내의 당해 기초지자체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큰 무리가 없는 규모로 예상하여 설정하게 됨(유사개발사례 참조)
- 500억원, 1000억원의 부지가격 기준은 분포를 고려하여 설정한 값임

표 12 | 이전기관 부지가격에 따른 분류

구 분	주요 기관명
100억원 미만(4)	▪ 농업기반공사, 국립특수교육원, 교통안전공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19)	▪ 국립종자관리소, 국립식물검역소,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조달청중앙보급장, 한국전산원,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전기공(주), 전파연구소, 한국전력기술(주), 농업연수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가스공사, 중앙119구조대, 한국도로공사, 농업생명과학연구원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7)	▪ 국토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국제공무원교육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업공학연구소, 한국토지공사
1,000억원 이상(10)	▪ 한국농업전문학교, 국방대학교, 대한주택공사, 영화종합촬영소, 법무연수원, 원예연구소, 국립경찰대학, 축산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작물과학원

- 100억원 미만인 기관은 4개로 농업기반공사가 22억6천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국립특수교육원, 교통안전공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여기에 속함
-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인 기관은 19개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가스공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등이 있음



| 그림 9 | 이전기관 부지가격 순위

-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인 기관은 7개로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토지공사 등이 있음
- 1,000억원 이상인 기관은 10개로 영화종합촬영소, 원예연구소, 국립경찰대학, 농업과학기술원, 작물과학원 등이 있으며, 작물과학원은 1조 8,306억 8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임

2) 이전기관 성격에 따른 분류

- 이전대상 기관들의 기관성격은 현재 활동범위를 가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세분류 다음과 같이 하였음(교육, 연구, 기술원, 위원회, 학교 등)

표 13 | 이전기관 성격에 따른 분류

구 분	주요 기관명
공단(3)	▪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육 및 연구(8)	▪ 국립특수교육원, 자치인력개발원, 국제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관리 및 검사(5)	▪ 국립종자관리소, 국립식물검역소,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구원(11)	▪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전파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공사(7)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술원(5)	▪ 한국전산원, 작물과학원, 기술표준원, 농업과학기술원, 금융정보분석원
주식회사(2)	▪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기술(주)
학교(3)	▪ 한국농업전문학교, 국방대학교, 국립경찰대학
위원회(7)	▪ 무역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기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기타(5)	▪ 중앙119구조대, 광업등록사무소, 조달청중앙보급창, 영화종합촬영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이전기관 성격중 연구원이 11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교육 및 연구기관 8개, 공사 7개, 위원회 7개의 순으로 나타남

3) 이전기관 입지에 따른 분류

- 이에 대한 분석은 현재 기관이전 됨에 따라 후속적으로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용도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됨
- 특히,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들의 상업 또는 주거용도로의 전환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의 당해 기초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에 편입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경기도 차원 및 당해 기초지자체의 활용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임

표 14 | 용도지역별 입지에 따른 분류

구 분		주요 기관명	비고
주거지역 (23)	1종일반	국세공무원교육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연수원, 작물과학원, 자치인력개발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개발연구원	주거 + 녹지
	2종일반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전력기술(주), 전기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금융정보분석원, 중앙환경보존정책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무역위원회	GB
	3종일반	한국전산원	
상업지역 (14)	일반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교통안전공단, 조달청중앙보급장,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중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전기공(주), 국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상업 + 주거
공업지역 (1)	일반	전파연구소	
녹지지역 (14)	자연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국립경찰대학, 법무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촌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B
		한국도로공사, 기술표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광업등록사무소, 국방대학교, 중앙119구조대	
관리지역 (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발진흥 일산2택지
		한국노동교육원, 영화종합촬영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주거지역에 23개의 기관이 분포되어 있으며,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각각 14개, 관리지역 4개, 공업지역에 1개 기관이 있으며, 그 중 GB 내에는 13개 기관이 있음

V.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방안

1. 정부의 이전적지 활용방안

가. 이전적지에 관한 활용방안

해당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수도권 경쟁력 제고 및 토지이용 공간구조의 효율적 활용도 고려

상당수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보존녹지에 위치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도 제고 및 종합적 계획개발 추진

- 지자체와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시설 또는 지역발전 계기가 될 수 있는 업무시설, 주거단지 등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므로, 향후 중앙과 지자체간 용도변경 및 재원분담 등에 대한 문제가 쟁점

이전계획 발표와 동시에 T/F를 구성하여 이전적지 활용방안 마련에 착수, 필요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소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활용방안 마련

전국을 수도권, 강원·충청·전북·광주·대구·부산권 등 7대 광역권과 제주도로, '7+1'구조로 나눠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을 금융·비즈니스 중심지, 제주도를 관광휴양거점으로 각각 육성 및 활용한다는 복안

나. 수도권 이전적지의 산업클러스터 지원

수도권지역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되, 이전적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특례적용

이전부지에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의 입주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클러스터에 대해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

● 지원의 기본방향

-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사항은 현실적으로 지원가능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되, 각 기관별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와 기관 간에 협약체결 시 개별적으로 협상 및 타결

●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 이전적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업지방이전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관련부담금 면제
- 부족재원지원, 집단이전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제공,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수도권 지사 설립에 융통성 부여 등

● 직원에 대한 지원

- 사택·기숙사 건립 지원 및 아파트 우선 분양 등 적극적 주거대책 마련
- 이전기관 직원 자녀의 전·입학 특례 허용, 특목고 설치 등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
- 지방이전수당 및 이사비용 지원, 배우자 직장 알선 및 퇴직 시 실업 급여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이전방안 발표 이후 대상기관이 이전을 계속 지연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익 조치 방안을 동시발표
- 정부예산 지원억제, 업무범위축소, 기관장 경영평가반영, 수도권 내 사옥 신·증축, 이전금지 등

2. 경기도의 대응전략

가. 경기도 기본 대응 방향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개별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함
 - 공공기관 이전은 개별공공기관의 특성, 즉 공공기관의 기능과 사업목적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함
- ‘이전 최소화 전략’에 따른 사안별 대응 방안 강구해야 함
 -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그 기능과 설립목적에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 지역주민·지역특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즉 지역경제침체, 공공기관의 업무상 비효율성 초래 등

나. 경기도의 대응전략

- 국가책임 하에 『先대안, 後이전 원칙』에 입각하여 이전 추진해야 함
-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입지 계획수립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해야 함
 - 이에 따른 자원 부담은 전체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함
 - 계획수립 기본방향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둠
 - 이전적지는 첨단산업, 차세대 성장기술산업,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
-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지자체에 무상 양여 또는 무상 대부하도록 함
- 이전적지에 대기업 본사 유치
- 산업직접활성화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공장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이전시기 및 재산활용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해야할 것임
- 이전적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현행대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이전적지 개발계획수립을 관할 자치단체에 일임함
 -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과 같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3.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방안

가. 이전적지 활용방안

-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수도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
 - 도와 해당 시 및 주민이 참여하는 T/F 또는 위원회 등 구성
-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건축 제한
 - 반드시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개발·활용 및 도시체계를 혼드는 특별법 제정 지양
-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수도권에 부족한 공공시설 및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활용
 - 과거 공장지방이전 부지에 아파트 건축한 정책실패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됨
-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대책을 사전 수립
 - 수도권 발전종합 대책에 근거하여 지역주민 등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

나.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방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및 지구를 중심으로 우선 대상지역을 선별
 - 부족한 도시지원시설과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 고려된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
- 동일 지역 내 복수의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연계하거나, 일부 이전부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지정
 - <표 15>에서와 같이 경기도 내 56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시·군에서는 표에서 제시된 특화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이 바람직